

- 계 시 글 -

2026년도 게시글 목차

1. 침수 피해 주장, 현장 확인, 그리고 미진행된 현장검토

- 사건기록 01. 침수 피해 주장, 현장 확인, 그리고 미진행된 현장검토
- 행정행태 01. 왜 설명은 유선으로 길어지고, 답변은 서면에서 짧아지는가
- 법령해석 01. 확인되지 않은 우수 배수시설은 왜 단순 분쟁이 아니라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가
- 대응절차 01. 유선 민원 제기 뒤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
- 결과·복기 01. 유선 안내와 미진행된 현장검토 끝에 무엇이 남았는가

2. 매수한 부동산에 위반·불법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면?

- 사건기록 02. 매수한 부동산에 위반·불법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면?
- 행정행태 02. 회피는 늘 비슷한 문장으로 나온다
- 법령해석 02. 쟁점은 “미등재”가 아니라 “미확인·오설명·근거자료 미제시”이다
- 대응절차 02.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해야 한다

- 결과·복기 02. 이번 아이템이 남기는 결론

3. 하나의 부동산 문제를 여러 개로 분절시키는 행정기관 행태

- 사건기록 03. 하나의 부동산 문제를 여러 개로 분절시키는 행정기관 행태
- 행정행태 03. 행정은 왜 하나의 문제를 통합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처리하는가
- 법령해석 03. 복합민원의 핵심은 ‘민원인의 반복 방문’ 이 아니라 ‘행정 내부 조정’ 에 있다
- 대응절차 03. 복합민원은 처음부터 ‘통합 사안’ 이라는 점을 전면에서 세워야 한다
- 결과·복기 03. 복합민원의 진짜 문제는 사건의 복잡성이 아니라 행정 내부 조정의 부재에 있다

4. “의무가 아니라 권한” 이라는 말로 실태조사를 지우는 행정의 자기논리

- 사건기록 04. “의무가 아니라 권한” 이라는 말로 실태조사를 지우는 행정의 자기논리
- 행정행태 04. 자기 시정을 위한 내부 절차가, 자기 면책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
- 법령해석 04. 제79조의 “할 수 있다” 만 떼어 읽으면, 시행령 제115조 전체가 지워진다
- 대응절차 04. 민원인은 ‘위반 여부’ 만이 아니라 ‘조사체계가 작동했는지’ 를 물어야 한다
- 결과·복기 04. 실태조사 미실시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책임의 흔적이다

5. 주민이 물어야 할 것은 미관이 아니라 설계와 안전근거다

- 행정행태 05. 수해 복구인가, 또 다른 위험물 설치인가

6. 행정기관의 답은 늘 같았다

- 사건기록 06. 행정기관의 답은 늘 같았다
- 행정행태 06. 설명은 하지만 판단은 끝내 미룬다
- 법령해석 06. 법제처가 있어도 책임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
- 대응절차 06. 답변을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책임의 빈칸을 기록으로 채워야 한다
- 결과·복기 06. 결국 국민은 비용을 내고, 그래서 기록은 증거가 된다

7. 행정기관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

- 사건기록 07. 행정기관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
- 행정행태 07. 행정은 강해 보인다. 그래서 더 오해받는다
- 법령해석 07. 행정이 실제로 집행하는 법과, 애초에 손대지 못하는 법
- 대응절차 07. 위반건축물 같은 사안일수록 ‘분쟁 언어’가 아니라 ‘규제법 언어’로 들어가야 한다
- 결과·복기 07. 행정을 상대할 때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준

8. 보완수사 명령 이후, 형사 사건은 다시 움직인다

- 사건기록 08. 보완수사 명령 이후, 형사 사건은 다시 움직인다

- 행정행태 08. “수사 중입니다” 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
- 법령해석 08. 보완수사는 ‘형식적 재검토’가 아니라 결과 통보가 필요한 절차다
- 대응절차 08. 국민신문고 요청서는 ‘질문지’ 처럼 써야 한다
- 결과·복기 08. 고소인의 목표는 ‘답변’이 아니라 ‘기록 반영’이다

9. 형사고소 후 첫 고소인 조사, 서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

- 사건기록 09. 형사고소 후 첫 고소인 조사, 서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
- 행정행태 09. 첫 고소인 조사에서 강조해야 할 4대 쟁점
- 법령해석 09. 고소인 진술의 의도와 목적은 ‘민사분쟁’이 아니라 ‘기망 구조’를 설명하는 데 있다
- 대응절차 09. 고소인 조사 현장에서의 수사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
- 결과·복기 09. 첫 고소인 조사는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료의 의미를 남기는 절차다

10. 법령보다 지침이 먼저 나오는 행정

- 사건기록 10. 법령보다 지침이 먼저 나오는 행정
- 행정행태 10. 법령 판단을 지침 인용으로 대체하는 방식
- 법령해석 10. 지침은 법령을 이길 수 없다
- 대응절차 10. 이첩·종결이 아니라 직접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
- 결과·복기 10. 문제는 지침의 존재가 아니라 지침의 선별적 사용이다

11. 공부에는 없었지만, 현장에는 있었던 것들

- 사건기록 11. 공부에는 없었지만, 현장에는 있었던 것들
- 행정행태 11. 민원을 과태료 하나로 접는 행정의 습관
- 법령해석 11. 공인중개사는 공부를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다
- 대응절차 11. 쟁점을 나누어 묻고, 검토 기록을 요구해야 한다
- 결과·복기 11.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처리 방식

12. 행정청의 회피성 답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

- 사건기록 12. 행정청의 회피성 답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
- 행정행태 12. 회피성 답변은 ‘거부’ 보다 ‘초점 이동’ 으로 만들어진단다
- 법령해석 12. 우수 배수시설 문제는 왜 단순 민사 문제로만 볼 수 없는가
- 대응절차 12. 회피성 답변에는 ‘다시 질문하는 문서’ 로 대응해야 한다
- 결과·복기 12. 회피성 답변의 진짜 효과는 ‘민원인의 문제제기를 흐리는 것’ 이다

13. 민원인이 물은 것은 “누가 책임지느냐” 가 아니라 “현장에서 확인했느냐” 였다

- 사건기록 13. 민원인이 물은 것은 “누가 책임지느냐” 가 아니라 “현장에서 확인했느냐” 였다
- 행정행태 13. 문제제기를 흐리는 답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
- 법령해석 13. 민원인의 신청 취지는 행정청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

- 대응절차 13. 흐려진 문제제기는 다시 문서로 고정해야 한다
- 결과·복기 13. 흐려진 질문을 되찾는 것이 민원 대응의 출발점이다

14.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인의 ‘기억’ 이 아니라, 행정청의 ‘기록’ 을 확인하는 절차다

- 사건기록 14.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인의 ‘기억’ 이 아니라, 행정청의 ‘기록’ 을 확인하는 절차다
- 행정행태 14. 행정청은 정보를 ‘안 주는 것’ 보다 ‘줍게 주는 방식’ 으로 대응한다
- 법령해석 14. 청구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구분해야 한다
- 대응절차 14. 부분공개·비공개·부존재 회신에는 항목별로 되물어야 한다
- 결과·복기 14. 정보공개청구의 목표는 자료 수집이 아니라 행정청 답변의 책임 고정이다

15. 처분사전통지는 ‘처분 전 마지막 안내’ 가 아니라 ‘다룰 수 있는 첫 문서’ 다

- 사건기록 15. 처분사전통지는 ‘처분 전 마지막 안내’ 가 아니라 ‘다룰 수 있는 첫 문서’ 다
- 행정행태 15. 형식적 처분사전통지는 민원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
- 법령해석 15. 처분사전통지는 ‘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’ 를 보장하는 절차다
- 대응절차 15. 처분사전통지서가 이상하면 ‘의견제출서’ 로 절차 하자를 고정해야 한다

- 결과·복기 15. 처분사전통지 단계에서 기록하지 않으면, 이후 처분은 행정청의 프레임으로 굳어진다

16.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감사 청구 → 이상한 논리의 감사 종결

- 사건기록 16.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감사 청구 → 이상한 논리의 감사 종결
- 행정행태 16. 모두가 조금씩 판단했지만, 아무도 전체 과정에 책임지지 않았다
- 법령해석 16. 자체감사는 필요하지만, 자기면책은 감사가 아니다
- 대응절차 16. 행정은 말기는 것이 아니라, 기록으로 조율해야 한다
- 결과·복기 16. 행정청이 제멋대로인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.

2026. 7. 30.

목록 관리 김훈철

행정논평